

2026. 4. 14.(화)
보도시점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4. 13.(월)

비상경제 상황, 이웃 위기 더 빨리 찾는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 협조 요청 -
- 누구나 이웃의 어려움 신고 가능... 전기·수도 검침원, 교사, 경찰 등 생활 밀접 직종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4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각 부처별로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교직원,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민생 밀접 직종이 주변의 복지 위기를 보다 면밀하게 포착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생 밀접기관·직종 예시(복지위기 알림 관련) >

- ▲ 사회복지·장애인시설 등 종사자, ▲ 의료인, ▲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직원,
- ▲ 이장 및 통장, ▲ 전기·수도·가스 등 검침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금융·가족·정신건강·장기요양 등 관련기관 종사자, ▲ 관리사무소 종사자·주거복지사, ▲ 경찰, ▲ 구조구급대, ▲ 우편집배원 등

정은경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위기 알림 앱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복지위기 알림 앱 개요
 2.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 자료
 3. 복지위기 알림 앱 홍보 자료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044-202-3123)



□ **추진 배경**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식을 보완하고, 복지위기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개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앱(APP)

* 복지위기 알림 앱 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 (이용자)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등 업무유관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검침원, 경찰 등

- (위기 알림 대상)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이웃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등

- (알림 정보) 위기상황, 가구유형 및 대상자 정보(성별, 주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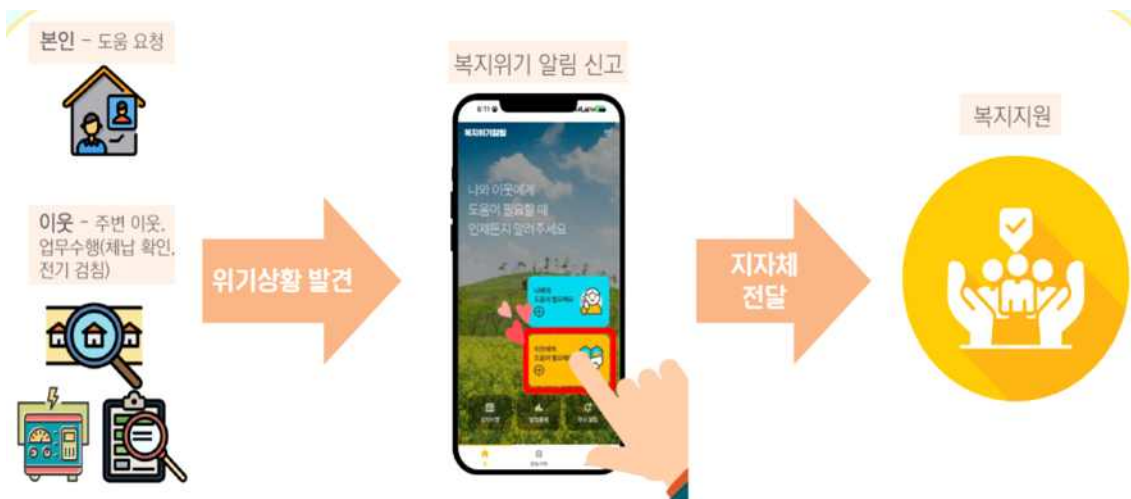
- (처리 절차) ① 본인·이웃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 ② 시스템 접수·지자체 배정 ⇒ ③ 읍면동 대상자 확인 및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❶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❷ 접수·지자체 배정	❸ 대상자 확인·상담 및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 ▶ 모바일 위기알림 앱·포털(복지로)을 통한 도움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요청 접수(행복이음) ▶ 대상자 정보* 매칭(행복이음-사각지대발굴시스템) *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해당 여부, 위기정보 입수, 수급상담 이력 등 ▶ 지자체 배정(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확인(읍면동) * 수급·상담 이력 등 조회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 - 유선 또는 방문 상담 - 필요시 공공·민간 등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1. 복지위기 알림 앱 설치 방법



2. 복지위기 알림 앱 운영 방식



3. 주요 Q&A

도움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공무원, 이·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요청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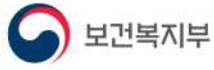
-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요청 내용 입력 (비회원, 익명 도움요청 가능)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 나와 이웃이 생계곤란, 신체·정신건강, 고립 및 고독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도와주나요?

-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
- 건강관리서비스,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나와 이웃의 복지위기상황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